

간담회

대북지원의 현황과 과제

김연철, 손종도, 이우영, 임형준

간담회

대북지원의 현황과 과제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5년 5월 22일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형준 WFP 한국 사무소 소장을 초청하여 '대북지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제기구 혹은 NGO 기관의 대북지원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22일(금) 뉴국제호텔

사 회

조병구(KDI)

토 론

김연철(인제대학교), 손종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임형준(WFP)



조병구: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오늘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및 민생 인프라 구축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제기구 및 NGO 기관의 대북지원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임형준 WFP 한국사무소 소장께서 WFP의 대북지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임형준: WFP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2012년에 “Zero Hunger Challenge”를 선언하면서 UN 차원에서 우리 시대에 기아를 끝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식량안보가 기본이 되어야 다른 개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고,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빈곤퇴치와 식량안보 문제이다. 먼저 WFP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다. WFP가 아직 한국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기아퇴치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기구이며 현재 9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긴급구호분야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식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incentive이기 때문에 식량을 incentive로 다양한 개발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2,100여 개 NGO와도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6·25전후로 1억 2천2백만달러를 한국에 지원한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에 이어 한국 지원 유엔 기구 중 두 번째 규모로 WFP가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1억 200만달러를 지원하였다. WFP의 북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 옛날과 같은 아사, 기아는 많이 사라졌지만 숨은 기아(Hidden Hunger)는 중요한 이슈이다. 임신 직후부터 만 2세까지인 1,000일 동안에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1,000일 동안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WFP 북한사업의 핵심이다. 만성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남북 간 신체상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영양실조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체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어 키와 체중에 영향을 받으며, 철분이 부족하면 어린이들의 인지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고 산모사망률 증가와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요오드 부족은 지능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북한에서 어린이 중 약 30%가 만성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서 양강도는 40%에 육박하지

만 평양은 2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성영양실조는 양강도나 자강도 모두 심각한 수준이다. 빈혈도 대부분 지역에서 30% 이상의 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곡물 섭취량은 많이 증가되었지만 단백질이나 미량 영양소 등의 섭취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했으며 애초에는 취약계층인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240만명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지원규모 감소로 현재 100만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90%는 영유아이며 10%는 임산부 및 수유부이다. 현재 북한 내 9개도 87개군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등이 강화된 영양강화 식품인 슈퍼시리얼을 생산해서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제공하고 있다. 7개의 슈퍼시리얼 공장이 있고 7개의 영양강화 비스킷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WFP가 취로사업인 “Food for Community Development”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한정된 자원 내에서 영양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다지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진 않다. 2002~11년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3,600헥타르 정도 땅에 묘목심기를 실시하였고 간척사업도 실시했으며 1,400km의 둑도 쌓았고 댐도 23개 정도 건설하였다. WFP의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WFP의 원칙은 “No access, No food”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원사업을 벌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자료는 정기적으로 공여국 및 관계 기관과 공유한다. 우리가 최근 발행한 자료는 2012년 발행한 WFP/UNICEF/WHO의 영양실태조사,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WFP/FAO의 작황조사(CFSAM)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부자료 및 현장실사를 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며 VAM(Vulnerability Analysis and Mapp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을 구분한다.

조병구: 말씀 감사하다.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5·24조치의 영향 여부, 둘째, 현재 5·24조치하에서 국제기구의 지원방향이나 전략, 셋째,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북한만의 절실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형준: WFP가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은 2007년이다. 이후 받은 적이 없고 2014년부터 7년 만에 지원이 재개되었다. 사실 5·24조치와는 상관없이 작년에 영양사업의 유지가 어려워 북한사업을 폐쇄할 뻔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정부가 지원을 재개하고 다른 공여국들이 추가지원을 해줘서 유지할 수 있었다. 지원사업 방향이나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

다시피 핵심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1,000일사업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영양실조가 지속되면 차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WFP는 이전의 대규모 곡물지원에서 최근 선별적 영양지원으로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조병구: 추가 설명 감사하다. 그럼 이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손종도 부장께서 국제기구와 NGO 간 대북지원의 차이점과 협력 혹은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손종도: 큰 틀에서 보면 WFP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은 규모가 큰 반면에 국내 민간단체는 규모가 작다. 남쪽 NGO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게 1996년 이후이고 남쪽 민간인의 북한 방문도 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식량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2002~03년 이후에는 남쪽 NGO에서 ‘개발지원’이란 표현을 쓰면서, 단기성의 지원이 아닌 개발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NGO의 대북지원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제기구와 국내 NGO의 대북지원의 내용적 차이는 없다. 문제는 국제기구와 국내 NGO의 차이는 지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공여기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또 공여기구의 평양 상주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 당국은 여러 공여기구에 대해 각각 다른 접촉기구를 두고 있다. 유엔과 접촉하는 기구는 국가조정위원회(NCC)이고, 상주 공여국과 비상주 공여국은 국가 차원에서 유럽, 아태국, 미국 등 국가별로 나눠 접촉한다. 유럽의 NGO는 ‘조선-유럽연합협력조정처(KECCA)’가 담당한다. 미국 NGO는 ‘조선-미국민간교류협회(KAPES)’가 상대한다. 한편, 조선적십자회의 경우는 다양한 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남쪽 공여기구들과 접촉하는 북한 기구들을 살펴보면, 외무성과 전혀 상관없이 당 차원에서 접근한다. 남한 통일부와 관련 부처를 담당하는 곳은 내각이고, 남한 NGO의 파트너 기구는 민족화해협의회이다. 남한의 종교계는 조선불교도연맹, 그리스도교연맹, 천주교인협회 등이 종교에 따라 구분해 접촉을 한다.

과거의 경우 남쪽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북측 담당자가 다르면 북에서 서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북쪽 당국이 여러 기구를 두어 개별 공여기구와 따로 접촉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남쪽 기구의 협력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기 어렵다.

대북지원에 관한 국제회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고, 2005년도에는 북경에서 국내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주최로 “대북협력 국제 NGO 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2009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로 매년 국제회의를 열고 있다. 북한이 1995년에 유엔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 올해가 대북지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는 그 기념으로 서울에서 2박 3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대부분 협력과 조정인데,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년 회의한다. 실질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많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북에 대한 이해나 지원단체의 상황에 대한 공감감이 이뤄져 왔다.

사실 대북지원 초기에는 북한에서 민간단체라는 개념도 이해하지 못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개념을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꾸준히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북을 방문하고 접촉하면서 북에서도 남쪽의 민간과 지자체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조병구: 국제기구와 NGO 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라.

임형준: 통상 NGO와 WFP의 협력이 활발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손종도: 평양에 상주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WFP, WHO, UNDP 등 유엔기구나 유럽 NGO(EUPS)이다. 미국 NGO는 과거 연합체 성격으로 상주했으나 지금은 없다. 상주기구들은 매주 금요일에 미팅을 개최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유럽 NGO는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형준 소장께서 모니터링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WFP의 모니터링 체계가 가장 잘 되어 있다. 또 WFP가 WHO나 UNICEF에 비해 북한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측면에서 WFP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조병구: 손종도 부장께서 유럽 NGO와 국내 NGO의 공동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NGO의 협상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종도: 최근 평양에 상주하는 유럽의 NGO는 6개이다. 2004년까지 이들 유럽 NGO는 자신들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사업을 진행한 데 반해 최근에는 EUPS라는 단위로

북한에 상주하고 있다. 2004년을 전후로 해외 NGO들의 지원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NGO들이 계속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외교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과 스웨덴 등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대사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한 대사가 북한 관련 업무도 책임지면서 정기적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병구: 말씀 감사하다. 그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우영 교수께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범위 및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또한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라.

이우영: 우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개념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 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며,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시다시피 1995년부터 시작한 대북지원이 올해로 20주년이 되었다. 20년은 적지 않은 시간이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시도해 왔다고 생각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남북관계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대북지원을 위한 남한의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경험 부족, 대북지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미성숙, ‘퍼주기 논란’으로 상징되는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역시 문제다. 그리고 특정 지역 및 업종에 편중된 지원 현황, 명확하지 않은 대북지원사업의 목표 및 방향, 국제적 지원 체제와의 협조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북지원은 크게 인도적 차원, 남북관계, 그리고 국가이익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인도적 차원은 긴급구호적 성격이 있고, 지원의 근거는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원범위

는 제한이 없어야 하며 목적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화해협력이라는 측면이 있다. 지원 내용에는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이 있다. 이것의 바탕에는 민족주의가 있다. 지원에는 제한이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을 지향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이익 차원에서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긴급구호, 개발지원이 모두 해당된다. 지원 근거는 경제·안보, 이익실현이다.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인도적 지원에 전략적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NGO를 비롯해 각 기관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해 우리 내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도적 지원의 세 가지 차원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등 대북지원사업은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들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고민해야 한다. 먼저 정부와 민간부문 간에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대북지원 관련 업무분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원과 교류의 좋은 사례가 제주도 감귤사업이다. 북한 주민들이 감귤을 먹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는 공급량 및 가격 조절을 통해 수익 향상의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좋다. 농산물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어렵지만 특산물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원단체의 내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면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병구: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남한 내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다음으로는 인제대학교의 김연철 교수께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과 5·24 조치 이후 대북지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김연철: 지자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민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지자체 교류와 민간 교류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지자체는 NGO의 참여나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



우선적으로 접경 지자체인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농업협력도 있고,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한 지원이나 문화교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이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정부가 남북교류에서 지자체의 역할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협력사업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학술교류와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같이 민간지원의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성사될 경우, 오랫동안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 민간교류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경분리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리가 가능한가'이다. 북핵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도 높다. 남북 정부 간 관계에서도 신뢰의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와 경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는 민관분리의 원칙도 필요하다. 정부 간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민간교류가 지속되면 남북관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시와 협력,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해도 과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딜레마가 있다. 북한이 더 이상 단순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단순지원이 아닌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특히 민생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5·24조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자체를 앞세워서 먼저 물꼬를 트고 단계적으로 지원 분야와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과 남한의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명분과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호혜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병구: 김연철 교수께서 대북지원에서의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대북지원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중도: 대북지원과 관련, 지난 2005년에 중앙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거버넌스(협치) 구조가 구성되기도 했다.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중앙정부가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민관협)를 구성, 대북지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 측에서는 통일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부 차관이, 민간에서는 북민협 회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민관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북지원 10년 백서』를 편찬하기도 했고, 「대북 긴급재난구호활동 관련 민관합동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했다. 민관협 회의는 참여정부 때까지만 개최되었다.

김연철: 대북지원에서 정부-지자체-민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협의회’와 같은 기구들의 재량권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민간 내부적으로 지원의 목적과 방법, 범위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가 행정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민간기구 내부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관계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의 농업협력이나 제주도의 감귤보내기 그리고 경기도의 각종 인도지원사업도 대부분 관련 NGO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루어졌다. 지자체 내부적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NGO의 네트워크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병구: 또한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향후에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

김연철: 지자체의 경우 국제협력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동아시아의 다양한 도시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 북한 참여를 장려할 수도 있고, 보건의료분야는 이미 WHO 등과 함께

공동협력을 하기도 했으며 교육분야나 문화분야에서도 유네스코를 통한 삼각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환경협력분야의 경우도 유엔 환경기구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병구: 대북지원의 실태와 각 주체들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토론자들에게 감사하다.